

2012년 프랑스 대선 결과에 따른 노동정책 변화 전망

김상배 (프랑스 파리제1대학교 박사과정(노동경제학))

■ 머리말

지난 5월 6일 치러진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 사회당(PS) 후보가 24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이번 결과는 1981년 대선을 연상시켰다. 당시 우파 정당(UDF, 프랑스 민주주의 연합)의 후보이자 현직 대통령이었던 지스카르 데스탱(Valéry Giscard d'Estaing)이 7년의 임기를 마치고 재선에 도전했으나, 사회당의 프랑수아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 후보에게 패했기 때문이다. 사회당으로서는 31년 만에 정권을 재창출했다는 감격을 누렸다. 하지만 정당의 희비와는 별도로 이번 선거 결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2007년 사회당 대선 후보였던 세골렌 루아얄(Ségolène Royal)의 공약이 당시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후보의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반면, 올랑드 당선자의 공약은 많은 변화 -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유럽 차원의 정책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다 - 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오는 6월에 치러지는 총선거(6월 10일과 17일)의 결과에 따라 내각 구성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국정운영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 따라서 당선자의 공약 중 노동과 고용에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예상 가능한 변화를 조심스럽게 살펴 본다.¹⁾

1)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한 비교작업은 많은 언론 매체에서 이뤄졌으나, 이 글은 주로 프랑스 양대 일간지로 불리우는 르 피가로(Le Figaro)와 르 몽드(Le Monde)를 참고하고, 르 파리앵(leParisien) 등과 같은 지역 일간지와 TV 매체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또한 공약 비교는 총 10명의 후보자들

■ 노동 및 고용 관련 대선 공약

세계 경제위기, 특히 유럽 전체가 재정위기에 휩싸인 가운데 치러진 이번 대선에서 프랑스 국민의 가장 큰 관심 분야는 ‘고용’이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10%에 도달한 실업률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청년 실업률은 20%를 상회하고 있다.²⁾ Pôle emploi(일자리 알선 및 직업교육 유도 공공기관)에 따르면, 현재 약 420만 명이 이 기관에 등록되어 있고, 그중 280만 명은 실업 상태에 있으며, 140만 명은 부분적인 직업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163만 명 정도가 1년 이상의 장기 실업자이며, 이 비율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들의 평균 실업 지속일수가 463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문제는 프랑스인들의 가장 큰 근심거리 중 하나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대선공약의 핵심일 수밖에 없었다.

■ 고용정책(실업대책)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내세운 실업대책 및 고용 촉진 전략은 주로 중장기적이고, 기업에 면세 혜택을 주면서 채용을 유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반면, 당선자의 공약은 즉각 시행하는 정책이다. 그의 고용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주로 서민지역에 살거나 교육혜택을 많이 받지 못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15만 개의 일자리를 우선 창출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대계약(Contrat de Génération)’을 통해 50만 명에게 직업 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중 1차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4명의 후보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4월 22일 치러진 1차 투표에서 올랑드(사회당), 사르코지(대중운동연합), 마린 르 펜(국민전선), 벨랑송(좌파전선) 순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상위 두 후보가 결선에 진출하였다.

2) 지난 5월 3일에 발표된 Eurostat의 자료에 따르면, 유럽 내 25세 미만 젊은이들이 경제위기의 첫번째 희생양이며, 프랑스의 경우 21.8%로 유럽연합 평균 청년실업률인 22.6%에 근접해 있다(http://epp.eurostat.ec.europa.eu/cache/ITY_PUBLIC/3-02052012-AP/FR/3-02052012-AP-FR.PDF). 또한 국제노동기구인 ILO가 지난 5월 22일 발표한 보고서 역시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올해 전 세계 청년 실업률이 12.7%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2016년 이전까지 젊은이들의 고용사정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의 일자리’라고 명명된 첫 번째 고용 정책은 오는 6월 중에 발표될 계획이며, 내년부터 사회적 혁신 분야 및 친환경 분야에서 15만 명의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보조(원조)계약’³⁾이다. 국가가 75%의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고, 최대 5년간 지속되는 이 노동계약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전일제 근로이며, 예산은 약 16억~20억 유로로 추정된다.⁴⁾ 현직 대통령의 핵심적인 고용정책으로 꼽히는 ‘세대계약’은 기업이 젊은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이들이 55세 이상의 현직 근로자들과 일대일 짝궁관계를 형성하여, 직업적인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게 하는 - 일종의 ‘사수-부사수’ 관계 - 고용정책이다. 이는 젊은이들의 고용을 촉진하면서 고령자들의 조기퇴직을 막고자 하는 정책이다. 이 경우 기업은 두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회보장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은 약 23억 유로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계획은 오는 7월 중순에 열릴, ‘성장과 고용을 위한 전국 회담(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와의 대화)’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이 회담에서는 향후 5년간 실업대책 및 고용전략이 가장 우선시된다는 방향을 표명하고, 이를 위해 또 다른 공약이었던, ‘헌법에 사회적 대화 기입’ 역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올란드	사르코지	마린 르펜	멜랑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계약’을 통해 약 50만 개의 청년 일자리창출과 55세 이상 근로자 일자리 유지 - 15만 개의 미래 일자리창출 - 유치원, 초등학교를 우선으로 5년 동안 6만 명의 교원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세 이상의 실업자를 최소 6개월 이상 채용(정규직 혹은 비정규직)하는 사용자들의 부담금 면제 - 적극적 연대소득 생활자(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주 7시간 노동 유도 - 실업자에게 교육 혹은 구직 강제 - 실업률 하락 시부터 실업수당의 점차적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국민 우선 고용 - 일자리 3분의 1을 45세 이상에게 보장 - 14세부터 견습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과 직업교육을 위한 국가 및 지역 기금 마련 - 실습생(인턴) 임금을 최저임금의 50%로 상향 조정

3) 콩트라 에데(Contrat aidé)는 사용자가 다양한 형태의 혜택(사회보장부담금 면제, 정부보조금 등)을 받으면서,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업활동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노동계약의 형태이다. 2010년 이후, 다양한 형태 콩트라 에데가 le Contrat Unique d'Insertion(직업 편입 유일 계약)으로 통합되었고, 현재는 성격에 따라 상업분야에서 체결되는 CIE와 공공서비스와 같은 비상업영역에서 체결되는 CAE로 나뉜다.

4) leParisien, ‘La lutte contre le chômage’, 2012년 5월 8일자, <http://www.leparisien.fr/election-presidentielle-2012/la-lutte-contre-le-chomage-08-05-2012-1990754.php>

■ 임금정책

현재 프랑스의 월 최저임금은 1398.37유로(1,500원 기준 약 200만 원, 세금 및 사회적 부담금 공제 전 총액)이며, 약 2~3백만 명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시간당 최저임금은 8.44유로에서 9.22유로로 상승했지만, 2008년 5월 2.25% 인상을 제외하고는 줄곧 소폭 상승해 왔다. 따라서 구매력 증가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당선자는 인위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회의적이고 최저임금 결정자는 정부라는 점, 그리고 프랑스 경기 회복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앞으로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란드	사르코지	마린 르펜	멜랑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위적인 최저임금 인상 반대 - 성장률과 연동하여, 성장률의 절반을 최저임금 인상률로 적용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위적인 최저임금 인상 반대 - 순임금 증가를 위해 최저임금의 1.2배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약 700만 명에 대해 사회적 부담금 공제(월 1,000유로에서 1,400유로의 임금 생활자에 대해 연간 순임금 840유로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유로' 인상을 통해 현재 금액보다 1.4배 증가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00유로로 인상⁷⁾

■ 노동시간 및 추가노동에 대한 면세제도

2007년 새롭게 들어선 정부는 추가노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노동시간에 대해 사용자에

5) Le Figaro, '올란드, 최저임금에 관한 제안을 구체화하다', 2012년 3월 11일자, <http://elections.lefigaro.fr/flash-presidentielle/2012/03/11/97006-20120311FILWWW00248-smic-hollande-precise-sa-proposition.php>

6) Le monde, '마린 르펜, 저 임금에 대해 200유로 인상을 약속하다', 2012년 1월 9일자, http://www.lemonde.fr/election-presidentielle-2012/article/2012/01/09/marine-le-pen-promet-une-hausse-de-200-euros-net-des-petits-salaires_1627380_1471069.html

7) nicematin.com, '장뤽 멜랑송, '최저임금 인상되면, 2년 내에 전체적인 임금 인상이 이뤄질 것이다'', 2012년 2월 23일자, <http://www.nicematin.com/article/home-page/jean-luc-melenchon-si-le-smic-augmente-les-salaires-progresseront-egalement-dans-l.795211.html>

게는 사회보장부담금을 면제하고, 노동자에게는 면세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 정책은 당시 사르코지 대통령의 35시간 노동제 탈피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고, 이후 35시간 노동제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추가노동 시행으로 인해 실질적인 35시간 노동제가 사라졌다는 인식이 팽배해졌고, 이는 두 가지 사회적 반응을 불러 왔다. 하나는 유명무실한 법적 노동시간을 변경하지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무분별한 추가노동에 제한을 가하지는 것이었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절반 이상의 후보자들은 이에 대한 언급을 피했으며, 당선자 역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추가노동에 대한 면세제도에 대해서는 당선자는 절충의 입장을 취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력난을 고려해 면세를 유지하는 대신, 2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 확대를 위해 면세 혜택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올랑드	사르코지	마린 르펜	멜랑송
- 20인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유지. 그 이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폐지	- 혜택 유지 - 2011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약 900만 명의 노동자들이 추가노동으로 인해 구매력이 향상 - 35시간 노동제 탈피	- 입장 없음	- 혜택 폐지 - 35시간 노동제 유지

하지만 이 공약의 실현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앞서 언급한 7월 회담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면세 혜택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경제 사정을 감안하면, 그것이 고용 창출로 이어질지도 불투명하다. 다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35시간 노동제 수호가 지닌 상징적 의미는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새로운 정부의 퇴직연령에 대한 입장도 이전 정부와 상반된다. 2010년 사르코지 대통령이 퇴직연령 개혁안을 통해 법적 퇴직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변경하였지만, 새롭게 선출된 올랑드 대통령과 여당은 '18세에 직업활동을 시작해서 41년동안 연금을 부담해 온 인구'에 대해 60세부터 연금 혜택을 받게 할 것으로 보인다.

■ 노동시장(노동유연화) 규제정책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정책도 눈에 띈다. 당선자의 공약과 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통해서 노동유연화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몇 가지 정책에서 유

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간접고용과 비정규직 사용이 빈번한 기업에 대한 법적 제재 방안이 그것이다. 특히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을 노사 자율적 합의에 맡기고자 했던 사르코지의 정책과는 달리, 노동시장의 갈등을 사회적인 제도의 틀에서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주식해고 금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것이 가지는 정치적·사회적 의미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유연화에 대한 규제 이외에도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차별에 대한 시행 의지도 엿볼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기업부담금면제정책 유지, 구직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종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무기명 이력서(사진과 이름이 없는)⁸⁾ 도입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실효성에 있어서도 여러 차례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올랑드	사르코지	마린 르펜	멜랑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안정 고용을 남용하는 기업에 대한 실업분담금 증대 - 청년들의 정규 직업으로의 진입을 늦추는 무분별한 실습(인턴) 생 사용 제한 - 실질적인 고용안정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개설 - 주식해고⁹⁾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력과 고용에 대한 협약'을 기반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경제 사정에 따라 노동시간 및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위원회의 역할 강화 - 기업 방침의 투명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고용 및 비정규직 고용 제한: 직원 수를 대기업의 경우 5%로, 중소기업은 10%로 제한 - 주식해고 금지

8) 이미 수년 전부터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이름, 피부색 등을 근거로 인종차별을 행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사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력서에 나타난 이름을 때문에 북아프리카 지역 출신자들(국적을 획득한 이민자를 포함)이 면접 불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경우가 여러 연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Des pratiques pour l'égalité des chances : QUE RÉPONDENT LES ENTREPRISES À LA HALDE?, HALDE, 2008, N 3).

9) Licenciements boursiers: 1999년 주식회사 미쉐린(Michelin, 미של랑) 사건 이후 -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7,500개의 일자리 감축 발표 이후 그 다음날 주식 가격이 12% 인상된 사건 - 이 표현이 프랑스에서 쓰이게 된다. 기업이 인원 감축을 통해 주식 가격을 올리고, 그에 따라 주주들의 배당금이 올라가는 현상을 일컫는, 다소 논쟁적인 이 표현은 그 후 수많은 언론 매체와 인쇄물을 통해 다뤄졌고(2001년부터 2005년 사이 500회 이상) 일반화되었다(Capelle-Blancard and Couderc, 2006). 2012년 2월에는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상원에 제출되었다.

10) 김상배(2012), 「프랑스 2012년 사회정상회담 결과 및 이후 발표된 고용대책」, 『국제노동브리프』 10(2), 한국노동연구원 참조.

■ 맺음말

머리말에서 언급한 것처럼, 선거운동 기간 발표된 공약만을 가지고, 향후 전망을 하기에는 다른 변수들이 많다. 가깝게는 6월에 치러질 총선거에서 사회당이 확보하는 의석수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으며,¹¹⁾ 본문에 언급된 7월 회담 역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대외적 차원에서 그리스의 유로화 포기 여부와 독일과의 정책 공조 긴밀도¹²⁾ 역시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헌법 개정의 의지까지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가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전 정부가 실업 해소를 위해 주로 직업교육 확대 및 강화, 그리고 노동유연화에 치중했다면, 현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위해 기업을 규제하거나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고용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른 프랑스 현실에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문제는 일련의 정책들이 어떤 실효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KLI**

11)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 두 가지가 있다면, 올랑드보다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후보였던 좌파전선 뿔랑송의 지지도가 급격하게 상승한 점(1차 투표에서 11%), 극우파로 불리는 국민전선 마린 르 펜 후보의 득표율이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18%에 육박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1차 선거 후 프랑스 언론에 가장 많이 노출된 단어 중 하나는 바로 프랑스의 '우경화'였다. 그러므로 6월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여전히 예측하기 힘든 변수로 남아 있다.

12) 당선자는 긴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참고문헌

- Le Figaro, <http://elections.lefigaro.fr/comparateur-programmes/nicolas-sarkozy>
- Le Monde, http://www.lemonde.fr/election-presidentielle-2012/visuel/2012/03/20/comparez-les-programmes-des-candidats-a-la-presidentielle-2012_1672519_1471069.html
- Le nouvel observateur, <http://tempsreel.nouvelobs.com/presidentielle-demandez-le-programme/20120207.OBS0740/cliquez-sur-deux-candidats-et-comparez-leurs-propositions.html>
- leParisien, <http://www.leparisien.fr/election-presidentielle-2012/emploi-fiscalite-retraites-comparez-les-programmes-des-candidats-19-04-2012-1962134.php>
- CAPELLE-BLANCARD Gunther et COUDERC Nicolas(2006), “Licenciements boursiers chez Michelin et Danone : beaucoup de bruit pour rien?”, In: *Revue française d'économie* 21(2), pp. 55~73.